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10
VOL. 683

모양도 색깔도 다른 나무들이 어울려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국회도 여야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October
Vol. 683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10월 4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성소미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고우영(선임비서관), 윤희진(선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 국회,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김진표 국회의장,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 김영주 국회부의장,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우택 국회부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주재
- 국회, 강변서재 문 열어

19 특집 -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법·제도보다 학교와 교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_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 침해 원인분석을 통한 교권 회복 방안 모색 _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의 생각 _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 교육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 의결 _박원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 교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_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30 길에서 길을 찾다 _오기형 의원

잠재력 품은 도시, 서울 도봉이 변한다

34 의원의 좌우명 _배준영 의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36 칭찬합시다 _주호영 의원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주시는 진짜 국회의원"

38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김영배 의원

"모두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 내리는 정치할 것"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 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CONTENTS



30



34



36



38

- 49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법률안 4건 의결
- 50 함께하는 국회**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토론회
- 52 법률, 시대를 읽다**
‘물순환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_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54 주재관 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의 현황과 전망
_서정덕 국회 인도네시아 주재관
- 57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만병초
- 58 이달의 청원**
- 60 위원회는 지금**
국회, 대법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실시
- 63 국회 뉴스**
- 66 법 시행 그 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68 만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70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기술이 구조한 시간 _김동철 겸임교수
- 72 국회 사람들**
“슬기로운 공직생활, ‘문화 맛집 국회’ 만들고 싶어”
_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
- 74 이달의 서평**
도둑맞은 집중력 _장형심 교수
- 76 고전에서 읽는 지혜**
조선의 학자·문장가 김창협이 ‘농암집’
_박석무 석좌교수
- 78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추첨으로 정했다?
_이봉선 서기관
- 80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내설악 오세암길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 84 국회 미술관**
실재와 이미지를 담는 이미지 혹은 실재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 87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 88 생활 속 우리말글**
어미의 정확한 사용 _김풍기 교수
- 90 정치 관련 주요 일지**

국회,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한-중앙아시아 간 최초의 의회정상급 다자회의체 출범



9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 왼쪽부터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사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김 의장,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국회는 9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5개국 국회의장을 포함, 국내외 9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1500년 전부터 문화를 나눠 온 오랜 친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역사가 남겨준 우정과 신뢰의 기억을

양분 삼아 새 시대를 향한 협력과 상생의 미래를 꽃피워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실크로드의 영광은 과거의 것만이 아닌, 다가올 미래에 다시 펼쳐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함께한다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의 영광이 한층 더 빨리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

‘새로운 30년을 위한 도약’ 의제로 한 본세션

개회식에 이어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비전과 방향: 새로운 30년을 위한 도약’을 의제로 한 본세션이 진행됐다. 본세션에서는 김진표 의장 주재 하에 각국 의장이 8분씩 발언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며 “반 세기간의 경제성장 속에서 상생 외교의 가치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 공고한 협력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증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구축 △교육·보건수준 등에서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은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적인 절충안을 모색해나가는 의회는, 다양한 국가 간 관점의 차이를 좁히고 유연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며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은 경제 위기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무역의 확대, 물류, 운송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 공유와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의 누를란벡 샤키예프 국회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새로운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기회이자 한 중앙아시아 유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 풍력, 태양광을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녹색경제 관련 협력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타지키스탄의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하원의장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구체적으로 수력과 섬유, 경공업, 화학, 식료품 산업 발전, 채굴업과 희토류, 기계, 화학, 농업, 교통,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회의장 전경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한민국을 파트너로서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경제, 디지털, 보건, 기후 변화, 지역 안보,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본세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국가 간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 의원 기구를 통한 협력, 의원 간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녹색수소·대체에너지, 디지털 전환, 관광 등 분야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 협력 주제로 특별세션

이어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김진표 의장의 주재로 각 의장이 5분 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중앙아시아는 현대 국제 경제의 중요한 참여자가

됐다”며 무역과 경제, 투자에 있어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관련 협정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무역 장벽과 제한을 철폐하는 데 있어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의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지키스탄의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하원의장은 수력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나아가 제약회사와 의료센터의 건립 등 의료분야 협력과 식품, 광업, 디지털 등을 포괄하는 다분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은 대한민국이 카자흐스탄 최대의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서 수많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며 향후 항만, 의료분야 등 다분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자들.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내외 9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카밀라 탈리에바 의원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역규모는 5년 간 5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별세션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그간의 경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면서 주로 에너지와 SOC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 사업의 외연을 넓혀나가고,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통한 인적 교류로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국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특별세션은 ‘한-중앙아시아 디지털 전환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특별세션과 마찬가지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국 의장의 5분 발언으로 진행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타지키스탄의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하원의장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타지키스탄은 경제의 디지털화로 현대적 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의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스마트시티로서 조성하고 있는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정보 보호, 사이버안보, 지적재산권 등 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금융 등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제시하며 특히 한국과 5G 기술 협력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등을 실시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과 동시에 여성 IT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함께 인공지능 연구



‘한-중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끝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표단 만찬.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아시아 5개국 의장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사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김 의장,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발전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키르기스스탄의 박티벡 초이베크코프 의원은 “키르기스스탄은 IT 학교를 개교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방형 사회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받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 전환은 중아시아의 한국에 대한 협력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각국이 디지털 전환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단기간에 IT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경험과 기술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만약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보격차 완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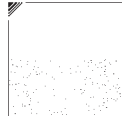
폐회식에서는 ‘한-중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을 6개국 간 합의로 채택했다. ‘미래 지향적 상생

관계 발전을 위한 선언’을 부제로 하는 선언문에는 한국과 중아시아 5개국 간 정례적인 의회 정상급 교류를 통해 각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공고한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자는 다짐을 담았다.

한편, 오찬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또한 두 특별세션 사이에는 각국의 전통차와 다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사랑재 만찬

회의가 끝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5개국 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국회의장회의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의지를 반영해, 이번 만찬은 중아시아 각국의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만찬 시작 전 김 의장과 중아시아 5개국 의장 및 대표단들은 사랑재 잔



국회 사랑재에서 송편을 빚어보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사랑재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이날 만찬에는 중앙아시아 측 의장 5명, 국회의원, 대사 등 30여 명과 우리 측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디밭에 마련된 야외 부스에서 직접 빈대떡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다. 또 전국 8도의 막걸리를 시식하고, 제기차기·윷놀이·투호 등 한국의 전통 놀이를 즐겼다.

김 의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소중한 비전은 한-중앙아시아가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우호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은 중앙아시아 5개국 의장을 대표해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와 자녀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화답했다.

식사를 마친 대표단은 사랑재 중앙 공연마당에서 전통 공연 ‘화관무’와 ‘사물놀이’ 등 여러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공연단이 강강술래를 시연하자 김 의장이 각국 의장들을 이끌고 직접 강강술래를 도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찬을 끝으로 18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자면담, 19일 공식 회의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과의 양자면담 등으로 이어진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끝난 뒤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은 “한복을 입고 송편을 만드는 등 한국 문화체험이 기억에 남는다. 강강술래를 다 같이 즐겼던 것도 즐거웠다. 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정말 잘 준비된 회의였다”고 감탄했다.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완전히 성공적인 회의였다. 돌아가서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한국을)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다자회의체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한-중앙아시아와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비전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출범했다. 차기 회의는 2024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 청취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권역별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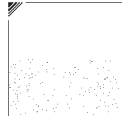
이번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헌 자문위원회는 첫 일정

으로 9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경기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G7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시민공청회 모습

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9월 14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강원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진행으로 이뤄졌다. 발제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와 협치를 위한 개헌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제시했고 지정토론에서는 이선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형철 강원일보 부국장,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충청권)’는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김종범 자문위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김용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개헌방향 필요,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기본권 주체성 ‘인간’으로 확대, 생명존중 등 다양한 가치 헌법에 포용,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9월 22일에는 제4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경북권)’가 대구 경북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최철영 대구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성종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원포인트 최소개헌의 필요성, 국회의원 임기가 2년씩 교차하도록 하는 교차 의석 방식 도입 등을 논의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양국 의회 수장, 전·현직 총리 등 만나
경제·개발협력 강화 및 방산·인프라 협력 확대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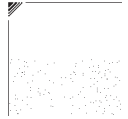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11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완 주나이디 상원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캄보디아·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세안 핵심국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 추진 4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와 방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했다.

캄보디아, 부산세계박람회 “확고한 지지” 천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사이 춤 상원의장, 훈 마넷 총리, 훈 센 전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방산분야 교류,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인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7일 캄보디아 하원 의회 환담장에서 쿤 쏘다리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7일 프놈펜에 위치한 독립 기념탑과 시하누크 선왕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헌화에 이어 쿤 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농업·의회 디지털 기술 교육협력 강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캄 FTA(자유 무역협정)와 올해 4월 체결한 한·캄 세관상호지원 MOU(업무협약)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340여 우리 기업이 건설, 금융, 제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아세안 국가 및 메콩강 주변국들과 호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캄보디아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쿤 쏘다리 의장은 김 의장에게 “한국은 IT강국이자 농업강국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 캄보디아는 식량 재배와 생산부문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농업 기술 이전과 함께 우리 국회 직원들이 한국 국회에서 디지털 행정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8일 프놈펜에 위치한 평화궁에서 훈 마넷 총리와 만나 양국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액도 약 20배나 증가했고, 지난해 한국·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02년 캄보디아가 한국을 지지해 한·일 월드컵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캄보디아의 지지에 힘입어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좋겠



김진표 국회의장과 방문단이 9월 8일 캄보디아 평화궁에서 훈 마넷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쉐어 아라 캄보디아 국회 외교위원장

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캄보디아는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한·캄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훈 마넷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사이 춤 캄보디아 상원의장, 지난 38년간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한 훈 센 캄보디아국민당(CPP) 총재와 만나 개발·인프라 분야와 경제·산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훈 센 총재(전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를 첫 방문한 이후 23년이 경과했는데, 캄보디아가 이제 메콩강·아세안 지역의 중심 국가로 올라섰다. 이는 모두 훈 센 총재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훈 센 총재는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이 직항로를 유지했는데, 이 직항로가 없었다면

캄보디아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됐을 것”이라며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늘고 있고,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당 대표로서 양국 국회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를 전했다.

김 의장, 말레이시아 진출한 건설·전기차·배터리 등 한국기업 지원 당부

캄보디아에서 공식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11일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방안,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활성화,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표 의장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해 11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11일 말레이시아 하원 면담장에서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월 안와르(총리)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첫 방문이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동방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며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제조·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42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월에 이뤄진 FA-50(한국형 전투기) 수출 계약을 계기로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말레이시아가 세계 3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은 “양국 관계는 지난 1963년 경기도(파주)의 ‘말레이시아교’ 건설 이후 오랫동안 강화돼 왔다”며 “이제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은 물론 기후변화,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도전에 함께 맞서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올해 11월 첫 주에 최종 결정이 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IE(국제박람회기구)에서 한국은 주제 선정이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박람회를 통해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여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빠르게 성장한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완 주나이다 말레이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협조·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를 열고 말레이시아 한화큐셀(Q CELLS) 공장을 방문해 태양전지 생산과정을 시찰한 후 순방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한무경 의원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최만영 연설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 1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9월 12일 국회 빈곤아동정책 자문위원회와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아동은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며 사회적으로는 기본적인 복지와 의료지원 서비스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와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동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가 하루속히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원정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이주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공적 부조 시스템과 아동복지법 보호 대상에 이주 아동 포함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환태평양 지속 가능 대화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의 잔당샤타르 국회의장, 바르테르텐 스포츠올림픽 장관, 불강토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이주 배경 아동의 의료, 복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주 부의장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주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9월 19일 열린 '경제외교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9월 19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했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영주·정우택 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34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 전략'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으로 이뤄졌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 러·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자국 중심으로, 핵심자원 전략무기화 되고 있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의회외교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주요 공급망 현안 및

의회외교 방향 제언' 발제에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우리 산업의 특성상 국내 생산비중 확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의회외교활동 현황을 보고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의회외교 지원이 필요한 주요 공급망 현안,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 전략,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 활동을 위한 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우택 부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박재호·전재수·엄태영·이인선·김홍걸·양정숙·전봉민 위원과 민간위원 김종경·안호영·남관표 위원 등이 참석했다. 🍷

국회, 강변서재 문 열어… “국회에서 힐링하세요”



북&베이커리 카페 '강변서재'

국회 방문객들이 커피 한잔을 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베이커리 카페 ‘강변서재’가 문을 열었다. 국회는 9월 22일 국회 사랑재 옆 강변서재에서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인사와 ‘국회 문화공간 조성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강과 서강대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강변서재는 국회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강변서재는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전문 사서들이 선정한 여러 분야별 도서를 비치했고, 다양한 종류의 음료, 빵, 다과를 판매한다. 강변서재 옥상에 있는 야외테라스에선 가을바람을 느끼며 한강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현재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변서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소를 대관한다. 사전예약을 하면 강변서재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찬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다. 강변서재 측은 “평일 야간 시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개소식에 앞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하는 카페에서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 탄생했다”면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변서재에서 시민들과 국회 가족 모두가 어울려 값진 소통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



특집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9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집자주>



법·제도보다 학교와 교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권 침해 원인분석을 통한 교권 회복 방안 모색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의 생각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교육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 의결

박원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교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육학과 교수

법·제도보다 학교와 교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새 학기를 맞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50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이 3개월여 지속되고 있음에도 교심(敎心)을 돌리기엔 한참 미흡한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톡하면 터지는 심각한 교권 침해, 달라진 것 없이 밀려드는 업무 등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단이 회복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무너진 자긍심과 끝없이 추락한 사기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현장 교원들은 호소한다. 특단의 교사 회복, 교권 회복, 교육 회복 대책을 지금 추진해야 할 이유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고충현안 1순위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다. 교총이 지난 상반기에 심의한 교권 침해 소송 사건 87건 중 44건(51%)이 ‘아동학대 피소’ 건이었다. 교권 침해의 ‘대세 중의 대세’가 된 것이다.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불만을 갖고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9월 1일 시행)에 따라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조성철 대변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는 분리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게 했는데 이는 학생의 학습권이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송을 초래하고 교원이 처벌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분리를 법제화하고,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인력 지원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총이 강력히 요구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현재 합의되지 못하고 법안이 보류된 상태다.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학생이 교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은 기재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렵다. 교총이 최근 교원 3만 3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9%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업무, 행정 잡무 이관·폐지해야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원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와 함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는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업무가 많아 힘든 차원을 넘어 교직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2022년 현재 일주일에 7.23시간에 달했다. 매주 근무하는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셈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방과후 학교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학생 태블릿 고장 수리 접수,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학교 정화구역 순찰, 이민 간 학생 학적관리, 심지어 원 어민 강사 휴대폰 개통 및 전세 계약 대행, 몰래카메라 탐지까지 온갖 업무를 떠맡고 민원, 책임까지 감내하고 있다. 가히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원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교권 침해다.

모욕·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본래 취지인 ‘능력 개발’은커녕 모욕·성희롱 평가로 전락해 교권 침해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서술형 평가에는 ‘유산하길 바란다’ ‘xx이 크다’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과 욕설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는 성희롱 표현을 한 고교생이 퇴학 처분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아예 보지 않는다는 교원도 많다.

서술형 평가만 문제가 아니다. 5점 척도 방식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학생에게는 ‘인기평가’로 변질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가 돼 버렸다. 현행 교원평가 방식은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제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법·제도보다 학교와 교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도 존중할 리 없다. 그런 교실에서는 그 어떤 법, 제도로도 가르침과 배움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갈등을 딛고 교육에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길 기대한다. 🍵

교권 침해 원인분석을 통한 교권 회복 방안 모색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가 시행된 이후, 교사들은 체벌을 대신하는 상벌점제, 주의조치, 훈육과 훈계, 분리조치 등의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14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가 포함되면서, 학부모 중 ‘아동학대 고소’를 악성 민원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의 모호함과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교사들은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레드카드’조차 아동학대로 인정받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디까지가 학습지도의 주의집중이고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에 닿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야 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에도 방치되어 왔던 아동학대처벌법이 많은 교사들을 압박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황수진 정책실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및 연구 지원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의견) 조사’ 및 학교생활 전반과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만들고 공교육과 교사를 소비재로 만들어 교육을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격하시키는 작용을 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단순 만족도와 요구를 맞추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하게 만들어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교원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교원능력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의 수업연구, 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리인 교육권이 있다. 대표적인 교육권은 수업권과 평가권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를 보면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단위학교의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 권한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기준과 작성 요령까지 국가가 규제하고 있고, 교육부 지침이 '부정적 내용은 최대한 쓰지 않고 긍정적 변화 위주로 기재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에서 생기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반발하는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필·수행평가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부모의 기재 및 수정에 관한 부당한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당 위법 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입시 환경과 교육 제도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핵가족,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육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국가로 상당수가 이관됐다. 그리고 이 중 많은 부분이 교육계로, 학교의 책임으로 넘어왔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사이버폭력예방, 성교육, 약물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영양교육 등의 범교과 교육을 의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이 부분의 예방교육만이 아니라 책임도 떠안고 있으며, 이 책임

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각한 교권침해를 겪고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안의 책임을 교사가 업무시간외, 학교외 모든 사안까지 감당한다. 심지어 학교 시설, 물품관리 등의 업무들까지 조정 없이 교사에게 부과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교사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에게 부과된 무한 학생책임제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책임조차 국가는 손쉽게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을 시작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이 있어야 할 학교에 '보육'이 들어오고 그 책임마저 교사들에게 전가되면서 교육이 훼손되어 왔다. 국가는 교사와 학교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돌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 입법 및 정책 참여권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

교육부 및 교육청 내 교사 출신이 적어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교육 정책 및 사업들의 현장 전문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일부 관리자들의 보신주의도 문제다. 교권 침해 상황을 은폐, 축소하거나,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민원을 넣자 확인도 없이 선제적으로 학교(관리자)가 교사를 먼저 고소하고 직위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현장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교육기관 시스템과 학교 교육의 진정한 책임자를 세울 수 있는 승진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 교육현장의 전문성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의 생각

먼저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학부모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마음 아픈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자살이 갑질 학부모 때문이라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더욱더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 또한, 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 있고 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일상이었고, 고민이었으며 해결해 보기 위해 나름 애쓰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문제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첫째, 가정교육의 부재다. 사회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설상가상 출산을 저하로 자녀의 숫자까지 줄다 보니 아이는 가족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금쪽이’로 자라고 있다.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오늘날 대부분 아이의 자아 형성은 가정과 학교가 아닌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육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잘못된 공감 교육과 인권 교육은 혼육을 아동학대로 둔갑시켜 버렸다.

둘째, 교육 방식의 문제다. 언제부터인가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에 출연하는 교육 혹은 심리전문가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공감하고 보듬어 주자고 하는 공감 교육이 대유행을 했다. 좋은 의미인 것은 맞지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김미성 공동대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황에서도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마음을 읽어주는 교육만으로는 힘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좌절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께 야단도 맞아보고, 실수도 해보는 다양한 경험과 훈육을 통해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싫어함(惡), 바람(欲)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며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워지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은 갈등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생 인권강화에 따른 교육의 부재다.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오래된 이야기다. 학교 내의 각종 교권침해 사례와 인권침해 사례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대부분의 양심적 교사들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훈육이 불법화되거나 금기시되어 학생생활지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교사의 교권침해 역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근 교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법 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 사법 체계에서 다뤄지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사라지는 형국이다.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법 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

하기 전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사회적 예절과 올바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인내를 가르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토론회와 부모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되고,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악성 민원이나 일부 학부모의 갑질도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한다.

학생으로, 학부모로, 교사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회복되고, 학교에서 교권이 회복되고, 정치논리나 떠넘기기식의 책임전가가 아닌 올바른 가정교육과 올바른 학교교육의 회복이 필요하다.

면책조항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서이초 교사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 의식을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사와 소통하길 원하며, 내 아이를 위해 진정 바른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교권의 수립을 위해 법보다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 당국 간의 소통이 필요하며 학부모 교육을 위한 좌담회 및 간담회를 많이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까지 회복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속도는 느리더라도 튼튼한 백년지대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

교육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 의결

지난 9월 15일 국회는 제410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상 ‘교권 보호 4법’이라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을 시작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교사가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교권 보호 4법’ 이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32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9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교권 보호 4법’은 6일 만인 9월 21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글은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개정 사항에 담지지는 못했으나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32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심의한 결과, 각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고, 취지가 달성된 3건의 청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는데, 이번 의결된 법률안들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원일 입법조사관
국회 교육위원회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셋째,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고, 학교의 민원 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넷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섯째,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여섯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을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행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은 논의 끝에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비록 몇몇 사안이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개정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학교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 등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교육공무원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직접 당사자인 교사가 학교에서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권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이후 연이은 현장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라는 교권 회복 조치가 최우선 교육 과제가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주말마다 현장교사들은 교권수호를 외쳤고, 이에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원인 교육공동체들의 권리와 의무 간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지난 교육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권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확보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교육공동체간의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망가졌다. 따라서 이번 교권정책은 교실에서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사이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정부의 종합방안은 교권과 학생 인권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조인, 상당,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학생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학



전제상 교수
공주교육대 교육학과



생인권조례를 개선해 학생의 권리와 책무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권고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조사 및 수사 개시과정에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직위해제 요건 강화,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침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학부모 민원 침해 유형 신설 및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창구 일원화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담았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회복 방안 실효성 담보

이번 교권회복 종합방안은 교권 관련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됐다. 학부모와 학생의 고소·고발 방지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 침해사항 기재,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학부모의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게 됐다.

외국의 경우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법적 근거를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하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은 2001년 ‘교사보호법’에 근거하여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미국 뉴욕시의 경우 ‘학생권리장전’을 통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여러 차례 강조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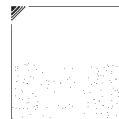
‘교권 보호 4법’ 통과를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교권보호 4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은 50만 교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실천해 교권 강화의 새 출발을 알리는 지름길이며,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실한 바람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

잠재력 품은 도시, 서울 도봉이 변한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가을을 재촉하듯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악수를 건네는 오기형 의원의 미소와, 마음을 달래듯 구름에 걸쳐있는 도봉산의 풍경을 마주치니 속상한 마음이 이내 사라진다.

오기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명산인 도봉산을 품고 있다. 교통의 요지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그의 지역구에서 도봉구의 미래를 만나봤다.

삶의 질이 달려 있는 ‘교통문제’

오기형 의원은 가장 먼저 지하철 방학역으로 취재진을 안내하며, 지난 5월 지하철이 확정된 GTX-C 노선 구간을 소개했다.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도봉 구간의 지하철 결정을 그 누구보다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리 도봉구의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도봉은 서울 도심 내에서도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외진 곳으로 교통문제가 몇십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더욱이 GTX-C 노선 중 도봉구간 지하철은 지역 현안 중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지하철을 해야 하는데 문제인 정부 당시 지상화 변경 결정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여당 의원이었던 제가 사실상 우리 정부와 싸우는 입장이 됐었죠. 솔직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지상화로 가자는 말도 많았지만, 제 지역을 위해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이후 국토부 장관 면담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등을 통해 지하철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을 다했었는데, 숙제 하나 끝낸 기분입니다.”

그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면서 GTX-C지하화 성과와 더불어 지하철1호선 지하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천역, 방학역, 도봉역 등 지하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우리 도봉의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제실과 공동으로 1호선 지하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관문 도시’ 계획 속 도봉구가 교통 중심지로 역할을 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이방학 경전철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 당시에 202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2023년 8월까지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GTX-C 부지인 방학역에서. 방학동을 상징하는 학 벽화 위로 지상철이 지나간다.

오기형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행정적으로 충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러한 정책사업은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만 빠진 시립도서관 건립, 조속한 추진 이뤄져야

방학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이동했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도서관 분관을 권역별로 5개 확충을 계획하고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그중 한 곳이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잡게 될 예정이었다. 오 의원은 “건립 부지는 확정됐지만 사업은 현재 2년째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기에 도서관

건립이 확정될 때 ‘이제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가 결정됐지만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건립 절차가 중단됐고 부지 매입 조차 진행되지 않고 기약 없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방학역과 가깝고 주요 노선 15개가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뛰어나 우리 도봉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죠. 부지매입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옥마을 생깁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신규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도봉구 방학동 일대가 한옥마을 대상으로 정해졌다. 선정된 도봉동 산 96-4번지 일대(도봉동



도봉 시립도서관 건립부지로 예정된 도봉청소년독서실 앞에서



원당마을한옥도서관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계단식 지형의 특징을 살려 특색 있는 한옥마을로 조성하고 방학동 543-2번지 일대(원당마을한옥도서관)는 연산군묘, 원당샘공원, 서울시보호수 1호, 정의공주묘역 등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한옥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봉구에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이 개관했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원당샘공원 옆에 위치해 있다. 전통 한옥 설계 양식으로 3개의 실(어린이자료실·사무실·프로그램실)과 중앙정원, 앞마당, 뒷마당, 툇마루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실을 비롯한 전체 구조는 개방형으로 이용객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풍경의 한옥 툇마루에 앉아 독서하면서 휴식할 수 있다.

오기형 의원은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쉼터 조성, 문화재 주변 경관향상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역사문화 둘레길과 연계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서울 동북권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오기형 의원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상해사무소 수석대표를 지낸 후 2016년 문재인 대표의

인재 5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변호사 시절 남북경협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6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산업구조 재편,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고용 창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4년 후 다시 도전한 제21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오기형 의원은 “낙선이 더 큰 배움이였다”고 말했다. “비록 떨어졌지만 4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지역 현안이 ‘교통 문제’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단순히 나라 경제를 살려보자는 마음에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크기를 떠나 현재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국민이 만족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웅진군)

인천항만 물류협회 회장과 국회 부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제21대국회에 입성한 배준영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다. 배준영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은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세숫대에 새겨놓았다는 훈계의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항상 새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신우일신은 중학생 때 접한 구절이지만 새로운 것을 보고 접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무장관 비서와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항만 물류협회장,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국회 부대변인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한 배준영 의원은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 활동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새로운 것을 이루려는 인생의 좌우명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그간의 활동 중 인천항만 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인천항 내항 8부두 약 1만 평을 개방하도록 주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졌던 인천 원도심 항만은 세월이 흐르며 공간의 재활용·환경 문제·물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도시 외곽으로 그 기능이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인천항만 물류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항운노조,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30번도 넘는 회의를



하며 방치된 부두의 개방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지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체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수(親水)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끝에, 2015년 말 드디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내항 8부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8부두 내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상상플랫폼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인천항 8부두에서 했는데, 전시회도 열리고 수천 명이 모여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8부두 개방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당사자로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통 문제 해결이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

제21대국회에서 배 의원은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매진해 왔다.

“이는 제 지역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이자 섬 지역, 접경지역, 문화재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구인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역시 계획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아직도 사회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께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 면적의 약 68%이자, 도심·농어촌·바다·육지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니 균형발전·규제개혁·경제성장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의원은 그간의 입법 활동 중 우선 유류세 인하 정책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했다.

“2021년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를 촉구해 관철시켰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올해 8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또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에 산정책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국회의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배 의원은 “균형발전이 정치의 목표인데, 특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반값 요금을 실현했으며 후속 과제 이행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두 차례 도전 끝에 백령도에 공항 건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강화-계양(서울) 간 고속도로 착공도 1년 앞당긴 것 등이 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특히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인천역발 KTX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발상지인 인천역에서 지방 곳곳으로 연결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화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종~신도에 이어,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연결하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착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옹진은 섬 지역으로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섬과 내륙 교통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게 저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김회재 의원이 주호영 의원을 칭찬합니다



김회재 의원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주시는
진짜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0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주호영 의원이다.

지난달 그를 추천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을)은 “5선 중진의원이지만 사심 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면서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셨을 때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기자회견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일을 잊지 못한다. 여야를 떠나 진짜 국회의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과분한 칭찬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면서 “계영노겸(戒盈勞謙)’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라’는 말처럼, 칭찬에 담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1982년 대학 졸업하던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3년까지 판사로 공직생활을 했다.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 영덕지원장, 상주지원장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탈하고 친절한 판사로, 반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판사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사립학교 교비 10억 원을 횡령한 현직 여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시키고도 합의조차 하지 않아 법정구속시켜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판사로 봉직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었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법률이 조금만 보완되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저를 입법부인 국회에서 꼭 한번 일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 테러방지법 통과 잊지 못해

주호영 의원은 5선의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일도 많다고 회상했다. 제19대국회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세월호 피해보상 관련 협상을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끌어냈던 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일을 꼽았다. 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며칠에 걸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도 생각이 난다고.

“제21대국회에서 총선 패배 후 첫 번째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안정시키고 대선 승리의 초석을 다져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과, 정권교체 이후 소수 여당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켰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가의 방만한 재정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비슷한 의미로 요익중생(饒益衆生)이란 말이 있는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 소외되지 않고 최대한 잘살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국회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을 추천했다.

“이상민 의원님은 제17대국회부터 저와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쉼 없이 함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방송토론에서 패널로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토론을 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참된 정치인의 모습을 자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상민 의원님께서서는 당 내에서 쓴소리가 필요할 때 주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모두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 내리는 정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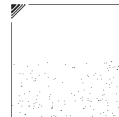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성북구갑)

김영배 의원은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서울 성북갑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2021년 초선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이 초선이지만 중량감 있는 초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2남 1녀 가운데 장남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야구와 축구를 좋아했던 꿈 많은 소년이었다. 고교 시절, 최동원 투수를 앞세운 롯데가 한국시리즈에서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을 했다고 한다. 그는 “부산에서 롯데의 전 경기를 빠짐없이 다 봤다”고 회상했다.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은 브니엘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동제를 앞둔 5월 그는 학교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역이었던 독일인 힌츠페터가 찍은 영상을 보게 된다.

“그걸 보고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잔혹



한 영상도 아니었는데. 말로만 들었던 광주가 눈앞에 펼쳐지고,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정경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1991년 서충련 집행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졸업 후 잠시 직장에 몸담았다가 1995년 선배를 도와 민선 성북구청 선거를 치렀다. 이후 당선된 성북구청장의 비서실장이 됐다. 그는 “거의 6년간 명절을 포함해 3일만 쉬었다. 신나게 일했다. 그러다 어느 날 번아웃이 왔다”고 했다.

‘나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자비로 미국 시러큐스대학에 유학을 갔다. 지금도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할 만큼 책도 많이 읽었고, 지적인 호기심도 채웠다. 2002년 귀국 후,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비서실장인 신계륜 실장의 보좌관으로 대선캠프에 들어가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으로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은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경남 봉하에 내려가 빈소 조문 실무책임을 맡아 100만 명의 조문객을 맞았다. “토요일 아침에 TV를 보고 있던 아내가 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악’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봉하에 내려가서 일주일간 있었는데, 그 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는 2010년 성북구청장에 출마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가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행정이란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듣고, 그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취임 전부터 자문기구를 만들고 과제 중심, 정책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요. 청와대의 국정체계를 그대로 성북구청에 가져왔

던 겁니다.”

2010년 7월 그는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으로 재선됐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에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다. 그 일이 우선이었다”고 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조정 비서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학폭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맡았다. 초선이지만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5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 시절부터,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올해 초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누우침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그 분의 용기와 울림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보는 ‘정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봤다. 김 의원은 “정치란 무엇보다 책임이고 결정”이라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정치, 그런 정치를 꼭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전세사기 피해 해결, 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8월 23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 피해 접수 및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보완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채권 매입 등 금융정책 활용 방안, 파산·회생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실은 8월 25일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년에 개통된 뒤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면서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하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

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계기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이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김기현 동서울대 교수가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영철 국회사무처 법제관이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 국회토론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와 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준비된 의료 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학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권선우 대한한 의사협회 의무이사 등이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9월 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 화물차 보급 정책 방안 모색과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소형화물차 보급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필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국가 재정 효율성 및 환경성 측면에서 친환경 소형화물차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 제시’ 포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9월 4일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직업계고 문제 및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5차에 걸친 포럼을 통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의를 거친 내용들을 정리 및 발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태규 의원의 진행으로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가 최종안을 발표하고 조은주 청춘여가연구소 연구원, 김지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종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고졸 취업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 후 급여, 승진, 작업환경 등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고졸로도 적합한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고졸 취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대전지역 의원(박범계·박병석·박영순·이상민·장철민·조승래·황운하, 이상 더불어민주당)들이 9월 4일 한밭대 국제교류관에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그동안 논의돼온 내용들을 다듬어 발제하고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임효인 중도일보 사회과학부 기자,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정된 타 지자체의 특별법의 특성을 비교하며 대전시에 적용 가능한 각종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자로 나선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장은 “대전이 보유한 여러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효인 중도일보 기자는 대덕특구 출입기자로서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

노웅래·박정·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진성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9월 5일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폭우와 폭염, 연이은 태풍 등 거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반복되는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결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이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상·기후 재난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이 참여해 정부·지자체의 기상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상청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9월 12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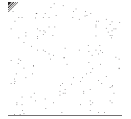
토론회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으며,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순찬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육성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 인상, 공공정책수가의 적용, 기금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한 지원,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 정비, 근무 여건의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9월 19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특허자료에 대한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 특허자료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연구개발·산업·안보 분야 특허자료 활용 방안’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등이 특허자료 활용의 필요성과 특허자료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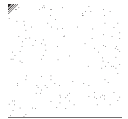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243건, 8.22~9.20)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8.22(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신동근,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이소영,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	도종환,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 과제	박수영 의원실	본관 228호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진성준, 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보육법인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정우택, 강기윤, 성일종, 백종현, 김미애, 김영주, 신동근, 고영인, 강훈식, 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신동근, 고영인, 김영주,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8.23(수)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혁신의료기기 산업육성 어디까지 왔나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시작할 것인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아이돌복서비스의 공공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배준영, 김도읍, 맹성규, 이양수, 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와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로서 소화가 분과 지속가능한가?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김교홍,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8.24(목)	국민공간, 디지털 시대와 탐정의 미래	김용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해양정책 및 제도 발전 방안	윤재갑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	우원식, 이수진, 윤건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국회토론회	강민정, 강성희, 김두관, 박주민, 심상정, 유정주, 장경태,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성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진우 삼국지 작가와 함께하는 삼국지와 인문학	이명수 의원실	평택항만공사 홍보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홍문표, 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25(금)	방송제작 현장 노동환경 문제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강은미, 장혜영,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청년세대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방안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오기형 의원실, 국회 법제실	김근태기념도서관2층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권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조정훈, 정태호,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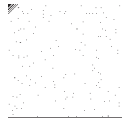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8.28(월)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3 무탄소 경연 'CF100' 성공 사례 오찾아라	양금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노인요양시설 입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김원익, 남인순, 서영석, 이재근, 정춘숙, 한정애,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LH 부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 법제화 방향에 대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8.29(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정, 서영교, 유동수,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귀는 열고, 정책은 이어가는 국회에 바란다	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K-방산 혁신포럼] '방산 전문인력 수급 진단 및 대안 모색'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8.30(수)	기후위기 극복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패러다임 전환 제시	정일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이상헌, 이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코로나19회복 지원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8.31(목)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	이원욱, 홍정민, 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홍익표 의원실	매한윤봉길의사가기념 세미나실
	과학기술 여성인재 활용 확대 국회포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9.1(금)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우원식, 이동주, 김용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이태규, 김예지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과제 국회 토론회	강선우, 김민석, 박범계, 신동근,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9.1(금)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심상정 의원실	국회 본관 223호
	한의학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불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부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본관 201호
	영아 발달의 중요성과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 통합 모델 방안	이상민, 김철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9.1(금)	재생에너지 이의공유제 현황과 과제	김성환, 김정호, 서삼석, 양이원영, 위성곤, 이용빈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민주당의 길 열린토론회	김종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회관 대회의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지속가능 미래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건물과 수송 중심의 탄소중립 사례발표 및 이행방안 토론	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9.4(월)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최춘식, 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백성의 신(臣), 방촌 황희 학술대회	황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	김정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및 선진 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권철송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 제시	이태규, 강득구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9.4(월)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고영민, 도종환, 서동용, 이상헌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9.4(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실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원이, 강선우, 최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국회 포럼 개최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	국회 1.5℃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윤건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9.5(화)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도종환,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정우택, 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법위의 조정방안 정책토론회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반(反)세계화 칸론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위성곤,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인구위기 대응 병역자원 미래전략' 세미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원회관
	2023 제6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국회자살예방포럼	의원회관 대회의실
9.6(수)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김민석,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김형동, 노용래, 박정,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례), 이은주, 이학영,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일종, 주철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 건립 한-미 공동 컨퍼런스	이현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신원식, 김병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남인순, 최종윤, 강은미 의원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9.7(목)	제1차 노동과 정치의 미래: 한국과 일본의 대화' 포럼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원회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춘숙, 최연숙, 이수진(비례),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김성주, 서영석, 한정애,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세미나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농림수산식품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활력회복	홍정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양금희, 이용빈, 임오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9.8(금)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반산업·생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업교육	김병욱, 서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뉴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뉴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김승수, 이달곤, 임이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국회자유경제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보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해킹 위협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조성 방안 모색	조승래,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박정하, 한병도, 송재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 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9.9(토)	중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권명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제원,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의 왜곡 허위 주장에 대한 공개 반론 및 토론회	이해식, 이동주, 이은주, 옹혜인 의원실,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치설명 및 활성화방안 논의를 위한 기획전시·학술세미나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9.7(목)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전혜숙,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비례),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제7회 국가전략 콜로키움-국가전략과 종합국력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9.8(금)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유상범, 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김승원, 김영배,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통합 평화과정 주요 사례국의 경험' 학술회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토론회	송옥주, 이재정 의원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변재일,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조승래,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교육 정책과 교육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순환 경제 표준화 포럼	국회미래연구원	더케이호텔 에비뉴1층 한강홀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한 방안 모색	홍익표, 김승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허울뿐인 재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소병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521담회의실
9.11(월)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이재정, 강성희, 강은미,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제2차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지성호 의원실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효있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김영주, 이원욱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적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철민, 배진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921담회의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태영호 의원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통일준비국민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송재호,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이용호, 김윤덕, 이용, 임오경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9.12(화)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안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521담회의실
	약자복지의 시작, 의료사각지대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말하다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921담회의실
	필수의료 육성 및 자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강기윤, 고영인, 서병수, 문정복, 정점식, 소병철, 류성걸, 유동수, 송언석,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깡통전세, 가정파탄! 악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심상정, 장혜영 의원실	국회 본관 223호
	소방배관 시스템 부식문제 해결 촉구 국회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세계전략 토론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제621담회의실
9.13(수)	저출산 희망벨 '땀'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미 일과 후쿠시마,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소병훈, 안호영, 윤준병, 윤미향, 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정운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수상레저 안전과 산업 활성화	정점식,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건설엔지니어링의 현재와 미래 생존 전략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9.13(수)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안철수, 인재근,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그리고 디지털 규제개혁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인재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30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삼중음성 유행암의 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에산제 정책토론회	심상정, 우원식, 강훈식,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이은주, 장혜영,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지 한국중성미자관측소 건립 포럼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저출생 시대,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신동근, 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플랫폼 독과점 사례 보고대회 및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 TF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정호, 이수진(동작구을),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9.14(목)	바이오 경제 시대의 글로벌 신약개발 육성 방안	신동근, 한정애, 김영식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소병훈, 어기규, 신동근,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가 빛 우려시대, 가계 빛은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여성을 살리는 일터	이수진(비례), 이은주 의원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들: 한랭응집소병과 신경섬유종증을 중심으로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방향	권명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김성주,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강선우, 김영주, 신동근, 고영인, 김원아,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개선 방안	조응천,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9.15(금)	고도영재,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김영호, 신현영,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 입법 공청회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노웅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교사 인식 개선 및 교직원 체제 개편 방안 모색	안민석, 조경태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국내 첨단산업 리소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말한다	우원식 의원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9.18(월)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윤영찬, 김병욱 의원실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웹다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웹다임연구회	국회도서관 강당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최재형, 신현영 의원실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요리 매연(조리흡) Free,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임이자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의회외교세미나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인재근, 오기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원받는 객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역할	박정, 이수진(비례), 이학영,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9.18(월)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9.18(월)	공항주변 드론·무인기 대응전략 세미나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이채익, 김희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박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변재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업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홍정민, 이재정, 김한정 의원실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	김경만, 김의겸, 최강욱 의원실	의원회관 제815담회의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합동 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315담회의실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남인순, 최연숙 의원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915담회의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이명수, 송재호, 김종민, 이은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515담회의실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교육문화포럼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강기윤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9.19(화)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토론회	강훈식,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국회 본관 1층 3식당 별실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전혜숙,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초전도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	하태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915담회의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교흥, 유동수, 이재명, 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421담회의실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남인순,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최영희,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915담회의실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	서정숙, 김성주,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621담회의실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17개 광역지자체 기후에너지 정책 평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김성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국제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이종성, 이명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민홍철,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	홍영표, 김운덕, 이개호, 이상현, 임종성, 전재수, 유정주, 이병훈, 임오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3차] 정치의 미래와 지역정당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제721담회의실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9.20(수)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서영석, 강은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의원회관 제915담회의실
	북한경제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선택: 북 급변사태 대비한 한·미·일 공조방안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영주, 소병철, 하태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521담회의실
	국회,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	안병길, 박재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	전혜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조명희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유익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변재일 의원실	의원회관 제421담회의실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스타트업	국회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살롱드 여의도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방안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721담회의실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법률안 4건 의결

국회는 9월 21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도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8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을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교통약자 이동권 차별 없애기 위해 뜻 모은 여야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토론회

여야 의원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9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 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국적과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이나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자동차 업계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완성차 업계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장이 작아 수익성이 우려된다”며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김영식·윤한홍 의원(국민의힘), 강남훈 KAMA 회장 및 강주엽 기아 신사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교통약자는 2016년 대비 79만 7천 명 증가해 전체 인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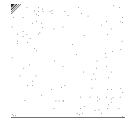
약 30%인 1천551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개념”이라며 “이제 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교통으로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을 배려한 저상버스, 차량 옆문을 확장한 택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영국은 2023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보급률이 5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대가 시범운행 성격으로 도입돼 아직 미미한 상태”라며 “업계도 정부, 국회와 함께 협력해 현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힘써야

발제를 맡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여야 의원들과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9월 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겸임교수는 해외 국가 중 세계 최초로 유니버설 모빌리티(장애인·비장애인 겸용 이동수단)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조명했다. 그는 “영국은 2022년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관련법을 제정해 택시와 렌터카 등 상업용 승용차에 장애인을 위한 탑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또, 관련법을 통해 좌석 및 휠체어의 위치,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띠, 휠체어 탑승 인원, 잠금장치 등 유니버설 모빌리티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권 교수는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마다 교통약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에서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주엽 신사업기획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휠체어 탑승 가

능 차량)을 비롯한 다목적·친환경 목적기반차량(PBV)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기아의 신형 WAV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겸용할 수 있게 설계돼 차량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장애인 콜택시 시장을 넘어 교통약자는 물론 도심 배송, 캠핑 등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PBV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차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 비장애 문턱 없는 차량 개발은 모두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글 박민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의 빈발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침수, 수질 악화, 극한호우 및 가뭄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반기에는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67%에 불과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강남, 광화문 일대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침수, 가뭄·홍수, 수질악화 등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하수도법’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고, 2020년부터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통합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 관련 정책들이 ‘수도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8월 18일 ‘여야 수해 대책 TF’¹⁾ 회의를 개최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9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법안을 상정했고,



오창석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1) 여야 수해 대책 TF는 2023년 7월 극한호우 이후 수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모인 5+5 회의체다.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동 법안은 9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순환 전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취약지역(‘물순환 촉진구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 지역에 대해 상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및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물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협의·심의 등을 거쳐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물순환촉진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2023.8.24.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유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사업의 중복 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물순환 촉진사업의 총괄관리자 지정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하나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총괄사업관리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운영·관리의 총괄, 사업의 중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는 물순환 촉진구역 내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복합적 물문제(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에 있어 감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업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향후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물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습 침수지역 등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물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관로개선, 도시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저류지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물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유출지하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인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순환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물순환 촉진구역이 신중하게 지정되어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의 현황과 전망



서정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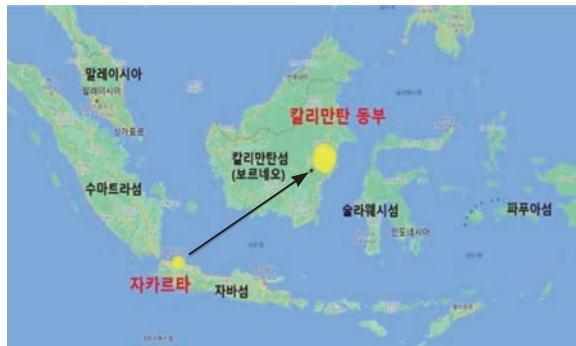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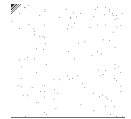
국회 인도네시아 주재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논의 배경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도서 국가로서 세계 4위 규모인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대국이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5천150km에 이르는 광대한 강역과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 자카르타가 소재한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다. 자바섬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1.3배로 전체 인도네시아 영토의 6.7%에 불과하지만 총인구의 56.6%인 1억 5천만 명이 거주 중이다. 이중 수도 자카르타에는 서울과 유사한 1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주변 위성도시까지 포함한 대도시 권역의 인구 규모는 3천만 명에 달한다. 자카르타 대도시권역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도로, 상수도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대기·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무분별한 지하수 추출에 따른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2050년에는 자카르타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토지가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자카르타 지역에 대한 인구집중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 이전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신수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권 이후다. 20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은 3년간의 심층분석을 거쳐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칼리만탄섬(우리나라에는 보르네오섬으로 알려짐) 동부 지역으로 이전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¹⁾ 해당 지역이

1) 칼리만탄섬에 조성될 신수도의 명칭은 IKN(Ibu Kota Nusantara)으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어로 군도(群島)의 수도라는 의미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수도 위치와 새 수도 위치



인도네시아 신수도 정부청사 조감도

신수도 지역으로 선정된 사유로는 인도네시아 국토 정중앙의 전략적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18만 헥타르에 달하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신수도 건설사업 개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사업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 입법, 사법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전해 완결적인 수도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제외한 행정기능 이전에 국한된 우리나라의 세종시 건설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신수도는 자카르타 면적의 4배인 2천561km² 규모에 거주인구 약 191만 명을 목표로 건설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를 자연친화도시(Forest City),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 스마트 도시(Smart City)로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

시 조성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구심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1월에 제정된 신수도 건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수도 건설사업은 1단계(2022~2024년) 정부핵심기능 이전, 2단계(~2029년) 수도지역 개발착수, 3단계(~2034년) 정부기능이전 완료 등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에 최종 완료된다. 특히 1단계인 2022~2024년간 대통령궁 및 정부부처, 입법부²⁾, 사법부, 군대, 경찰청, 정보기관 등 핵심정부기능을 신수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1단계 사업의 상징적 조치로서 내년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에 맞춰 대통령궁을 완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신수도 건설사업의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2)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령상 계획과는 달리, 신수도 국회의사당 건립사업은 2024년 1단계 사업 종료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이전 시기 및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소 불투명하다. 앞으로 신수도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의지다. 차기 대선이 내년 2월 14일에 예정되어 있고, 현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0월에 끝난다.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투쟁민주당, 집권여당)와 프라보워 국방장관(그린드라당)은 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 대권 후보 중 현재까지 수도 이전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만큼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신수도 건설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향후 신수도 건설 사업의 진척속도와 사업규모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둘째, 민자유치 활성화 여부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수도 건설 사업 규모는 총 488조 루피아(약 42.3조 원)로 전망되는데, 이 중 약 20%인 92.3조 루피아(약 8조 원)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충당될 예정이다.

이처럼 높은 민자 비중은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개발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민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계획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바, 전체 중앙정부지출 중 약 20%가 국채 이자지급에 지출될 정도로 경직적인 재정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신수도 건설 사

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 정부·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신수도 사업은 앞으로 세종시 개발 경험에 있는 우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좋은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민국의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9년 말에는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9월 8일에 열린 한-인니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정부 차원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24년까지 수행되는 1단계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사업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2025년 이후 2단계 사업부터는 우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민자사업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통해 수도이전과 관련된 정책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를 구성해 민관합작으로 신수도 건설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ODA사업을 통해 2025년 일 3만 톤 규모의 정수장 구축을 목표로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 및 기업은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만병초

국회의원동산 아래 ‘화합의 꽃밭’에 있는 만병초입니다. 당뇨, 고혈압, 신경통, 관절염 등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여 만병초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독성이 있어 식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철쭉과 닮은 꽃의 향기가 좋아서 중국에서는 칠리향(七里香) 또는 향수(香樹)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만병초의 꽃말은 위엄, 존엄, 희망입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이달의 청원

현재까지 제21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55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은 76건, 국민동의청원은 79건이었다. 이중 지난 한 달 동안(8월 17일~9월 17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9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7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동의청원인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수업 중에 싸움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방해하는 학생들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키고 관찰실 등을 만드는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8월 20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8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보호자의 범위에 교사를 포함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학대를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교육현장에서 학부모 악성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8월 20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다음 날인 8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소개청원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태원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등의 피해자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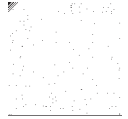
보장 및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8월 21일 남인순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해병대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8월 26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소개청원인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관리업체의 등록 기준 강화, ‘보증상품’의 명확화, 임대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처벌의 엄격화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구제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8월 28일 최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교권 개념의 법률적 정의 및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9월 9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9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9월 13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다음 날인 9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9월 14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국민동의청원인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방어·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9월 16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 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	정호성	교육위	8. 20.	국민동의청원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에 관한 청원	김승현	교육위	8. 20.	국민동의청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김덕진 외 78,467인 (남인순 의원 외 4인)	행정안전위	8. 21.	의원소개청원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김**	국방위	8. 26.	국민동의청원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	구성진(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	8. 28.	의원소개청원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지성	교육위	9. 9.	국민동의청원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김지성	교육위	9. 13.	국민동의청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김동명	환경노동위	9. 14.	국민동의청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엄정섭	보건복지위	9. 16.	국민동의청원

국회, 대법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실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9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쟁점이 됐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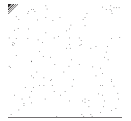
이종배 위원(국민의힘)은 “한전의 영업 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당 6.9원만 인상했다.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며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 ‘CFE’(무탄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도 “무탄소 전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청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방 후보자를 향해 “다핵종제거 설비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명호 위원(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에 대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기조가 다른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일방적인 방류에 반대한다는 건 똑같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도록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재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 후보자와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19일 청문회에서 여당은 우선 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위원(국민의힘)은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야당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재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를 만든 책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동용 위원(더불어민주당)은 “2009년 재산 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 처가 회사인 ‘옥산’의 김형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가족이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과정, 이 후보자 일가가 부동산을 분할 취득한 경위, 이 후보자의 회사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부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문제가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가 ‘처가 청문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에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일 앞에서 가장 용감하게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주제로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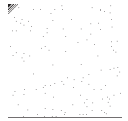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①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발제: 김수완 민간자문위원) ②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발제: 남찬섭 민간자문위원) ③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발제: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발제에서 연금개혁의 목표로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성, 형평성 확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료율 인상, 국고 투입,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기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유지를, 중장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시했다.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발제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방지와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상한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일반 조세 지원을 검토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발제에서 향후 50년 간 예상되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핀란드·일본·독일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부분은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산하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올해 6월부터 12회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 🍵



국회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9월 1일 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의원회관 1층)가 국회 의원 측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3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사랑 받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지역구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측사를 촬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스튜디오 기능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회는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확장하고 보완해 실시간으로 의정 활동을 전달·소통하는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열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가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역 우수 농·축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9개도의 대표 농축산물과 특산물, 과일, 김치, 가공식품 등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었고 지역본부별 및 축산물 시·판매 코너도 운영됐다. 또 소통관 안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선정 답례품과 추석 선물세트 홍보를 위한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전시관에서는 지역별 농축산물, 가공식품 답례품 10여 품목 등 총 100여 품목의 답례품이 전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에서 “수해·폭염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인건비, 기름값 등 비용까지 치솟아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계속된 고물가로 소비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터가 농민께 힘을 드리고 국회 가족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는 상생의 장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명절 선물을 여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을 2주 앞두고 장을 열었다”며 “이번 장터가 역대급 성황을 이루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대장터가 열려 농민과 국회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 센터에서 박수영 의원과 함께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장)가 토론을 펼쳤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종합국력 순위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실시된 평가에서는 각각 13위와 9위로 평가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9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력 요소는 정보력(3위), 과학기술력(4위), 국방력(5위), 국정관리력(7위), 교육력(8위), 변화대처력(8위)이었다. 반면, 사회자본력(17위), 기초국력(15위), 경제력(12위), 정치력(11위), 외교력(11위), 문화력(10위), 환경관리력(10위)에서는 9위보다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종합국력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와 향후 나아갈 바를 함께 토론하고 모색해 본 이번 콜로키움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미래전략 수립

을 위해 의미 있는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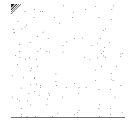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월 7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이 중 첫 번째 순서인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는 국세수입 오차에 대한 원인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정부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토론자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은 세수오차의 현황 및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개선과제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한 세수오차 완충장치 마련, 일시적 수입이 지출 증가



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재정규율 확보, 오차분석을 통한 세입전망 방법의 보완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 자료집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s://www.nabogo.kr>)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경상북도교육청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월 1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더케이호텔 경주 가야금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지방소멸은 섬뜩한 말이지만,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니 구체적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양 기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발굴해가자”고 밝혔으며, 임종식 교육감은 “향후 입법조사처와 함께 여러 입법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구체적 협력 활동을 개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최한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이 ‘해외 유학생 유입 필요성 및 운영 활성화’를 각각 발제한 후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세나 경북연구원 연구원, 이숙

희 경북교육청 장학관, 김희정 한국생명과학고 교사, 황진석 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전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주제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9월 5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의회외교 연구의 일환으로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EU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인 이상민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어, 요르그 베벤도퍼(Jorg Weberndorfer)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EU의 녹색전환 및 녹색기술개발 정책 현황 및 미래중점 어젠더를,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이 한국의 정책 현황 및 미래 중점 어젠더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한-EU 기술협력에서의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대사관, 스웨덴 의회 산업무역위원회에서 개별 국가별 최근 정책 동향 및 기술협력 니즈를 공유하고 한국 측 토론자(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와 함께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6.16.]

가사도우미같이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지난해 6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근로자법의 내용과 기대사항들을 알아봤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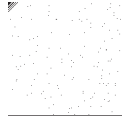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과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정광주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부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아울러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이어주던 직업소개소 및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이러한 기관(사용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던 직업소개소와 플랫폼 업체 모두 기관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희망 업체만 인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맞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가사노동자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해지 방법 및 절차,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도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관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는 전액 무료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아줌마, 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사'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말부터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언제든지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8월 말 기준 55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서비스(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올해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했으며, 경기도 내 양주시·성남시·시흥시에서도 올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했



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는 지자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현장 의견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한 결과 참여자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 정보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을 도모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글 고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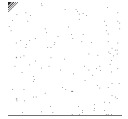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노동위원회 2023-07-26 의결

국회본회의 2023-08-24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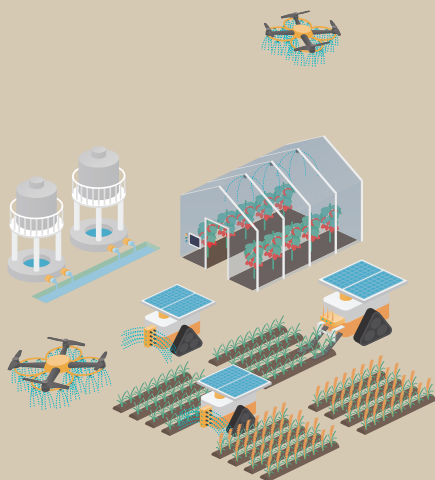
기술이 구조한 시간

시간에 관한 속도

일찍이 윤은기 경영학 박사는 ‘시테크-시간창조의 기술(1992)’이라는 저서에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과 기기를 사용해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2년 앞선 1990년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예견했다. 시간 자체야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용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한국 문화는 소위 ‘빨리빨리’로 대변되기도 해서 이러한 시간에 관한 속도를 가지고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감 없이 동화됐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한국인의 특성 탓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가 쌓이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쏟아져 나온 기술들은 여러가지 기능으로 무장한 IT를 세상에 쓸 새 없이 내놓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팜(Smart Farm)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실제 농촌의 농부들에게는 빌려 쓰는 일부 자동화된 농기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넓은 농지를 개간하는 나이가 지긋한 농민들에게 매년 다가오는 농사는 여전히 힘겨운 삶의 현장이다. 험난한 기상재해 같은 자연과의 싸움도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 넓은 경작지를 바라보는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애그테크(Agtech)로 진화하고 있다. 애그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다. 애그테크 중 유명한 사례가 수직농법이 도입된 건물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사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내의 센서들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여러 개의 수직벽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엄청난 생산량을 거둘 수 있게 한다. 또한 실내에서 움직이는 장비들은 무인으로 작동된다.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경제성만 제대로 평가한다면 넓은 들판에서 오랜 시간 힘들여 경작하는 시대는 필름속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 농부들의 노동시간이 줄고 여유시간이 늘게 된





다. 이제 새로운 고민은 품질 향상이나 농작물의 브랜드 가치 창출 같은 새로운 것들이다. 아울러 새롭게 생겨난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개념이 경제 전반에 확장됐다.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시간 단위로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이 대두됐고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소위 깃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불린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시간 단위로 근로자가 바뀌어도 비즈니스는 어떠한 단절도 없이 흘러간다. 첨단 재고 관리 기법과 물류 기법으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대형 마트에 가보면 심지어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도 손님들이 스스로 하는 자동화 코너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층에서는 과거의 고정관념인 취직이라는 틀을 깨고 깃 이코노미에서 생존에 성공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의 종류를 묶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속칭 ‘프로N잡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4차산업의 내용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일들이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모든 직장인들의 화두인 일과 휴식의 균형을 MZ세대들이 과거의 틀을 깨면서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2006)’에서 변화의 속도로 볼 때 교육이 마지막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이긴 하지만 원격 수업이 순식간에 보편화됐다. 다양한 사회 관계망 시스템은 누구나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기술이 합작해서 미래학자의 걱정을 보기 좋게 잠재웠다. 결과적으로 바쁜 아침 시간에 등교에 필요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가족의 품에서 살아났다. 국가적으로 또는 지구적으로 보면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틈새 시간을 구조해낸 것이다. 앞으로 기술이 촉발한 시간 구조 사례는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류에게 반드시 좋을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된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새롭게 다가오는 인문학적 과제일 것이다. 🍌

글 김동철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겸임교수

“즐거운 직장생활, ‘문화 맛집 국회’ 만들고 싶어”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

Q. 국회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A. 저는 기업에서 마케팅, 글로벌 CSR(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주로 해 왔어요. 이제 한 28년쯤 된 것 같아요.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 오신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Q. 문화소통기획관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문화소통기획관실은 언론과 국회방송을 통한 소통 이외의 거의 모든 소통을 담당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많은 소통이 문화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소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

어요. 하는 일은 조직 구조로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헌절 등 국회의 경축행사(매년 1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국회 방문의 날 행사 등 대내외 행사를 총괄하는 팀이 있고요, 공연과 영화 상영을 기획하는 팀이 있어요. 국회에서는 매월 새로운 공연과 영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팀이 있고요, 이 팀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있죠. 국회 방문객이 있으신데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국민이 방문합니다. 지난해에는 약 56만 명의 국내외 손님이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국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뉴스에서 보셨던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도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냐고 반문하시기도 하는데, 출입구의 경비대를 보시고 지레 짐작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국회에 1층 전문박물관이 있는데, 지난해 개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박물관은 의회 정치사에 중점을 두고 약 3만 5천 점의 사료를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관 1년차이니 지속적으로 사료를 수집, 보강하는 일도 큰일입니다. 국회 안에는 약 350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약 180점의 작품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에 대한 전시 기획과 운영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친근하게 표현된 국회 캐릭터를 관리하는 팀도 있고요, 국회를 소개하는 책자, 달력 등의 제작물을 발행하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 국민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Q. 국회에서 홍보 업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A. 야근을 하면서도 기분이 살랑살랑 봄바람 같을 때가 많습니다. 공연이 깜짝 매진을 기록했을 때가 그렇고요. 늘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공연을 보니 국회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분들을 만날 때, 행사 기획이 잘됐다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을 때, 손님들이 즐거웠노라고 말씀하실 때, 국회 참관과 박물관 관람이 부족했어났을 때도 신이 납니다. 보람은 항상 거창한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일과에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6개월 만에 18배가 늘고, 평균 시청률이 9배 넘게 성장한 지표를 보았을 때는 무척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웃음)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였습니다. ‘저 예산 가져다가 이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가 막상 벽에 부딪히니 아차 싶었습니다. 기업에 익숙했던 머리가 미처 거기까

지 생각을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Q. 현재 새롭게 추진하고 계신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가까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국회 문화극장을 영화의 명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OTT(인터넷 영상 콘텐츠 서비스)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영화보다는 각종 영화제의 수상작들을 상영하고 싶습니다. 상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와 손잡고 상영 중인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감독, 배우, 원작 작가와의 대화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상영 전에 감독의 의도를 듣고 영화를 보니 보는 재미가 배가된다고들 하세요. 감독도 관객의 반응을 직접 접하니 즐거워합니다. 감독과 관객의 호응을 보고 이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유명 영화제와 제휴를 추진 중이에요. 나아가서는 국제 영화제도 공부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된다면, OTT로 만나기 어려운 좋은 영화들을 국회 문화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회 생활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오래 기업활동을 하는 동안 시나브로 쌓여 온 경험과 교훈이 있고,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공직의 사명과 방식이 있어요. 이 둘을 바탕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들을 무사히, 또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매일의 일을 정성을 다해 하자는 것이 저의 다짐이자 포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하는 보람과 재미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

글 김영선 사진 유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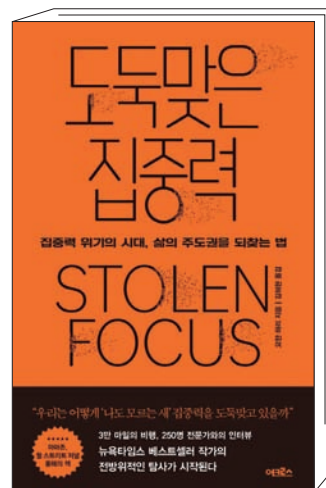
도둑맞은 집중력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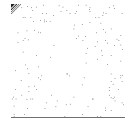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집중력을 당연시했다. 마치 집중력이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집중력이 선인장보다는 난초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 난초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죽을 것이다.” - 420쪽

최근 당신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장문의 문서를 정독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과업을 수행할 때 산만함으로 인해 집중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가? 당신의 지성을 한층 더 깊고 풍요롭게 이끌던 몰입 상태로의 진입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당신은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지 또는 점차 더 심해지는지 궁금하거나 염려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요한 하리의 저서 ‘도둑맞은 집중력’은 바로 당신을 위한 서적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게 될 즈음이면 당신은 집중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집중력을 돌보려는 신중하고도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볼 수도 있다.

집중력은 충동을 조절하고 선택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두뇌의 힘이다. 집중력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일상생활, 학업이나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 성취는 높아진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든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의 운영 원리는 인간의 정신집중 기제와 어긋나는 작동 기제에 기반을 둔다. 이익 추구가 그 모든 가치에 앞서기



저 자 요한 하리
역 자 김하현
출판사 어크로스
출판일 2023. 4.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설득산업(persuasion industry)’은 사용자의 동기 유발을 통해 이익을 파생 시키려는 명시적 의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은밀한 방식으로 지속하여 방해하고 최대한 정신을 산만하게 이끈다. 이를 위해 설득산업의 주요 병기로 작동하는 각종 전자기기, 소셜 미디어, 수많은 웹사이트가 치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된다. 사용자로 지칭되는 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며 행동하는 것도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집중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어쩌면 이것은 의도되고 설계된 착각일 뿐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위는 사용자의 생각, 선택,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끊임없이 암시되고 동기화되고 지배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경과학, 공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의학 등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쏟아낸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물을 면밀히 고찰하고 세계적인 과학자 및 전문가 집단을 체계적으로 인터뷰하며 집중력 파괴 또는 집중력 상실의 주요 원인을 전방위에서 포괄적이고 냉철하고 집요하게 파헤친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결론에 도달한다. 집중력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적 차원 이상의 것으로 그간 우리의 집중력은 거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약탈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산만함의 증가에 따른 집중력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우리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병폐가 주된 원인임을 차근차근 짚어나간다. 집중력 약탈의 주범으로 저자는 과도하고 빈번한 멀티

태스킹, 양질의 수면 결핍, 테크 기업들의 설득산업 모델, 독서 붕괴, 스트레스 및 만성적 각성 상태, 첨가물로 가득 찬 불량 식단, 성급한 약물 의존 치료, 잘못된 양육 방식, 고장 난 교육 등을 지목한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떤 방식으로 약탈하고 파괴하고 있는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폭로한다. 각각의 요인을 짚어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저자의 일화들은 독자의 일상 경험들과 매우 가깝게 중첩되며 독자의 공감을 일으키고 흥미를 더한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및 기계의 급속한 진보는 일면 우리에게 섬뜩한 두려움을 안긴다. 지금 우리는 인간 본연의 고유성, 자율성, 유능성, 창의성, 관계성이 더 보호되고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집중력은 인간 존재의 심리적 강점들을 배아하고 성장시키고 꽃피우는 토양이다. 이 책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집중력이 어떻게 은밀하게 소비되고 도난당하고 조종되는지 정교하게 파헤치며 집중력 위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난당하는 우리의 집중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다면적인 동시에 다층적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지평을 연다. 쉬운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는 더 위험하다. 집중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안의 모색은 마치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어렵게 지도를 구한 것 같은, 어쩌면 어두운 망망대해를 표류하다 반짝이는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반가움을 건넨다. 🍵

글 장형심(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조선의 학자·문장가 김창협(金昌協)의 ‘농암집’

김창협(金昌協:1651~1708)은 조선 효종 때 태어나 숙종 때 생을 마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요, 대문장가였다. 그의 호가 농암(農巖)이어서 그의 모든 저작을 수집하여 간행한 문집을 ‘농암집(農巖集)’이라 부른다. 농암이 세상을 떠난 뒤 1710년 문인들에 의해 원집 34권이 간행되고 그 뒤 1754년 부록 2권이 간행되어 도합 36권으로 발간됐다. 그 뒤에는 유문을 모아 속집 2권과 별집 4권이 1868년에 발간됐으니 모두 합해 42권의 방대한 문집이다. 조선의 9대 문장가 한 분의 글이어서 어렵기 짝이 없는 순 한문의 문집이지만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완역하여 한글본이 있으니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된 우리의 민족 고전이다.

농암 김창협은 안동김씨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증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청음 김상헌으로 병자호란에 척화파의 대표자로 심양까지 잡혀 가 고초를 겪은 뒤 좌의정에 이른 대신이요, 아버지는 영의정이던 문곡 김수항이었으며, 김창집·김창흡 등 농암의 형제들도 모두 학문·문장·벼슬로 명명거리던 가문의 후예들이었다. 더구나, 농암은 그의 아우 삼연 김창흡과 나란히 명성을 크게 남겼

는데 농암은 문(文)으로, 삼연은 시(詩)로 한 시대를 올린 형제였다.

애초에 농암은 벼슬하던 집안의 후손으로 젊어서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열렸으나 숙종 연간에 치열한 당쟁에 집안이 휘말리자 벼슬의 뜻을 버리게 된다. 아버지 김수항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고 형인 김창집 또한 노론 4대신으로 후명(後命, 귀양을 받은 후 사약을 받음)을 받아 화란(禍亂)의 집안이 되어 더 이상 벼슬살이에 대해서는 뜻을 달고 말았다. 그 뒤에 집안이 복권되어 예조판서에 대제학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산골에 숨어서 학문에 전념하고 제자를 기르는 일에 생을 바치고 말았다. 이런 가정의 화란이 끝내 그를 대학자이자 대문장가로 더 큰 명성을 얻는 위치에 이르게 하였다.

‘농암집’의 주요 내용을 보자. 제1권에서 제6권은 부(賦)와 시(詩)로 그의 글솜씨를 넉넉하게 보여준다. 제7~9권은 소차(疏劄)로 그의 정치적 견해를 말해준다. 제10권은 계(啓)·의(議)·강의(講義)로 정책건의서의 내용이다. 제11~20권은 모두 서간(書簡)으로 그의 학문과 문



장 및 성리철학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22권은 서(序), 제23~24권은 기(記)로 그의 문장의 진수를 보여준다. 제25~26권은 제발(題跋)과 잡저(雜著)다. 제27권은 묘지명, 제28권은 신도비명, 묘표, 행장이다. 제29~30권은 제문과 애사이며, 제31~34권은 그 유명한 농암잡지(農巖雜識) 4권이다. 이 잡지야말로 조선을 대표하는 문예비평서로 농암의 높고 뛰어난 비평 안목을 보여주는 당대의 값진 글이다.

‘농암잡지’는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 책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편은 학문에 대한 평가이고 외편은 문장가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농암은 내편에서 주자학 일변의 학문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로 조선 학자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특히 퇴계 이황, 율곡 이이,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 등의 학문에 대한 평가를 내려 후인들에게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 외편에서는 역대 문학가들에 대한 비평을 통해 고문과 문장가로서, 시문 비평가로서 탁월한 그의 안목을 보여준다. 중국의 한유·구양수·소식·황정견·왕세정·전겸익 등 당·송·명·청의 시문 대가들에서부터 이규보·이색·장유·이식·이정귀·박은 등 우리나라 시문 대가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비평으로 후학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학자로서의 농암을 보자. 농암은 우암 송시열의 문하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의 학통을 이은 제자로서 기호학파에 속했다. 그러나 그의 성리학 이론은 소속 학통에 구애받지 않고 독창적인 학설을 세워 율곡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퇴계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율곡과 퇴계의 옳은 학설에만 찬성하는 절충파의 위치에서 정당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는 창의적인 학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농암집’은 어떤 문집에서도 보기 드문 학자의 독

창적인 학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우 독특한 문집임을 알게 된다.

농암은 서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벼슬하는 관료로, 높은 수준의 학자와 문장가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가정의 화란에 분노를 느끼고 끝내 서울을 떠나 경기도 포천의 영평(永平)에 은거하면서 괴로움과 불행을 견디면서 학문과 문장의 대업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산골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은구암(隱求菴)을 당호로 짓고 은거처에서 도를 구하기 위한 구도자 생활을 했던 일을 그의 ‘은구암기(隱求菴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학자란 그렇게 구도의 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논어’의 “은거이구기지 행의이달기도(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에서 찾은, 숨어 살면서 뜻을 추구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도에 이른다는 아무나 하기 어려운 구도자의 자세로 일생을 바친 농암의 삶과 정신을 우리는 ‘농암집’에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농암의 뜻은 높고 높았다.

나의 9대조는 바로 농암 선생의 제자였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손수 필사한 10권의 농암집이 보관되어 전해진다. 우리 증조께서 모두를 필사하지 못하고 좋은 시문을 골라 축소판으로 손수 베껴 장정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책을 펴 보면서 언제 이런 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을까를 늘 걱정하면서 자랐다. 다행히 완벽하게는 읽을 수 없지만 지금은 ‘농암집’을 대강은 읽을 수 있는 수준이기에, 틈만 나면 ‘농암집’을 읽고 있다. 그의 유려한 고문체 문장, 그의 독창적인 성리학설, 그의 탁월한 식견에 늘 감탄하면서 읽고 또 읽는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추천으로 정했다?

국회법 제115조(회의록) 제1항 제6호는 ‘의석의 배정과 변동’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회의 회의록 마지막에는 항상 본회의장 의석표가 실린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는데 먼저 각 교섭단체별로 구역을 정하고 개별 의원의 의석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감안해 의장이 배정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의장석을 향해 제1교섭단체를 중앙에, 제2교섭단체를 우측에, 제3교섭단체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좌측에 배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 내에서의 개별 의석은 편의상 위원회별로 배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석은 소속 교섭단체의 뒷 열에 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헌국회의 의석 배정은 어떠했을까? 제헌국회 제1회 제2차 회의에서 도별제(道別制)¹⁾에 의한 의석 배정 방법이 채택되었는데 뒷좌석은 말이 잘 안 들어서 추천으로 하자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개의(改議)에 대한 거수표결과 동의(動議)에 대한 거수표결이 있었다.

제헌국회 제1회 제2차 본회의(1948.6.1.)

2. 국회임시준칙 결의의 건

○**배현 의원** 어제 제가 동의하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된 대로 도별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의장 이승만** 그 다음에 개의를 무엇입니까?

(‘추천으로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개의를 물을 터이니까……

○**조현영 의원** 맨뒤에 잘 안 들리는 데 앉힌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 좌석문제 대해서는 추천으로 하나 지금 그대로 하나 결국 듣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은 별도 마이크를 한 여섯 군데나 열 군데나 장치를 해서 다 들리도록 방도를 강구를 해가지고 좌석에 있어서는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

○**신익희 의원** 개이가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동의를 묻지 않는 것이 또한 규칙에 틀린 것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

○**배현 의원**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도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별제를 취하자는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본 동의자로부터 동의의 본의를 말하였습니다.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을 터이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지금 작성되기를 도별로 해서 나누어 앉게 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후 제62차 본회의에서 ‘의석은 매 회기 초에 추천으로 정한다’라고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제헌국회 제2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의원의 추천으로 의석을 배정했다.

제헌국회 제1회 제62차 본회의(1948.9.10.)

3. 국회법개정안 제1독회

○**백관수 의원** 그리고 원문 제1조5항에는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 초에 의장이 정한다’ 한 것을 개정안에는 ‘의원의 의석은 매 회기 초에 추천으로 정한다’ 그렇게 고쳐 본 것입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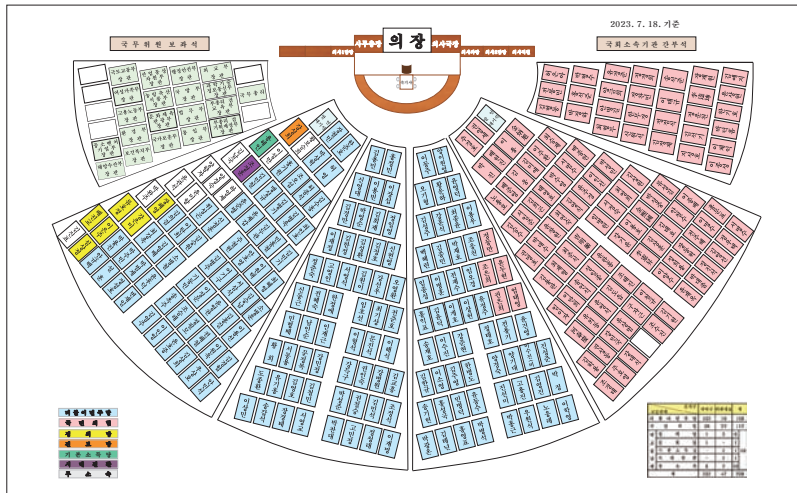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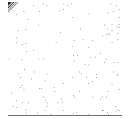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그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제헌국회 제2회 제1차 본회의(1948.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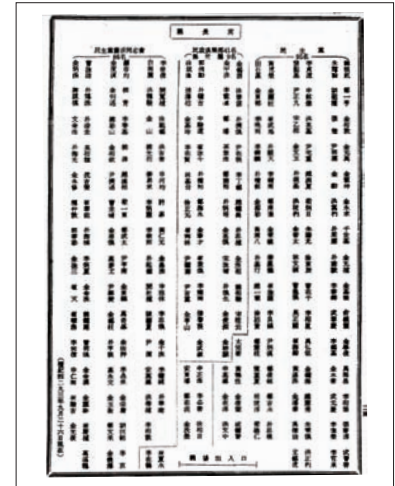
1. 의석배정의 건

○**의사국장 차윤홍** 의석배정에 관한 추천을 198개를 만들었습니

1) 제헌국회 최초 집회의 의석은 ‘국회구성국회준칙에관한결의’에 따라 각 도별로 배정했다.



제21대국회 제408회 제1차 본회의(2023.7.18.) 본회의장 의석표



제5대국회 민의원 제37회 제22차 본회의(1960.9.27.)
교섭단체별 추첨에 의한 본회의장 의석표

다. 그 추첨상자를 돌려서 출석의원은 추첨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뽑은 후에 그 종이에 있는 번호가 새로 추첨된 석차 번호가 될 것입니다. 결석의원은 감표의원되신 분이 대리로 이 정면에서 추첨을 해서 석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상오 10시40분 추첨개시)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으로 시작해서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와서 자리를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의원 의석교환 착석함)

그리고 원내교섭단체²⁾를 두면서부터는 각 교섭단체별로 추첨을 통해 의석을 정했으며, 제5대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매 정기회 초에 각 교섭단체별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의석표가 회의록에 처음으로 기재된 것은 제5대국회 제37회 제22차 본회의 회의록이

다. 국회법 제9차 개정(1960.9.26.) 시 의석의 배정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본회의장은 사각형 구조로서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는다. 특히 영국 의회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소속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의원의 선거구별로 본회의장 좌석을 배치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2011~2013)을 청취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섞어 앉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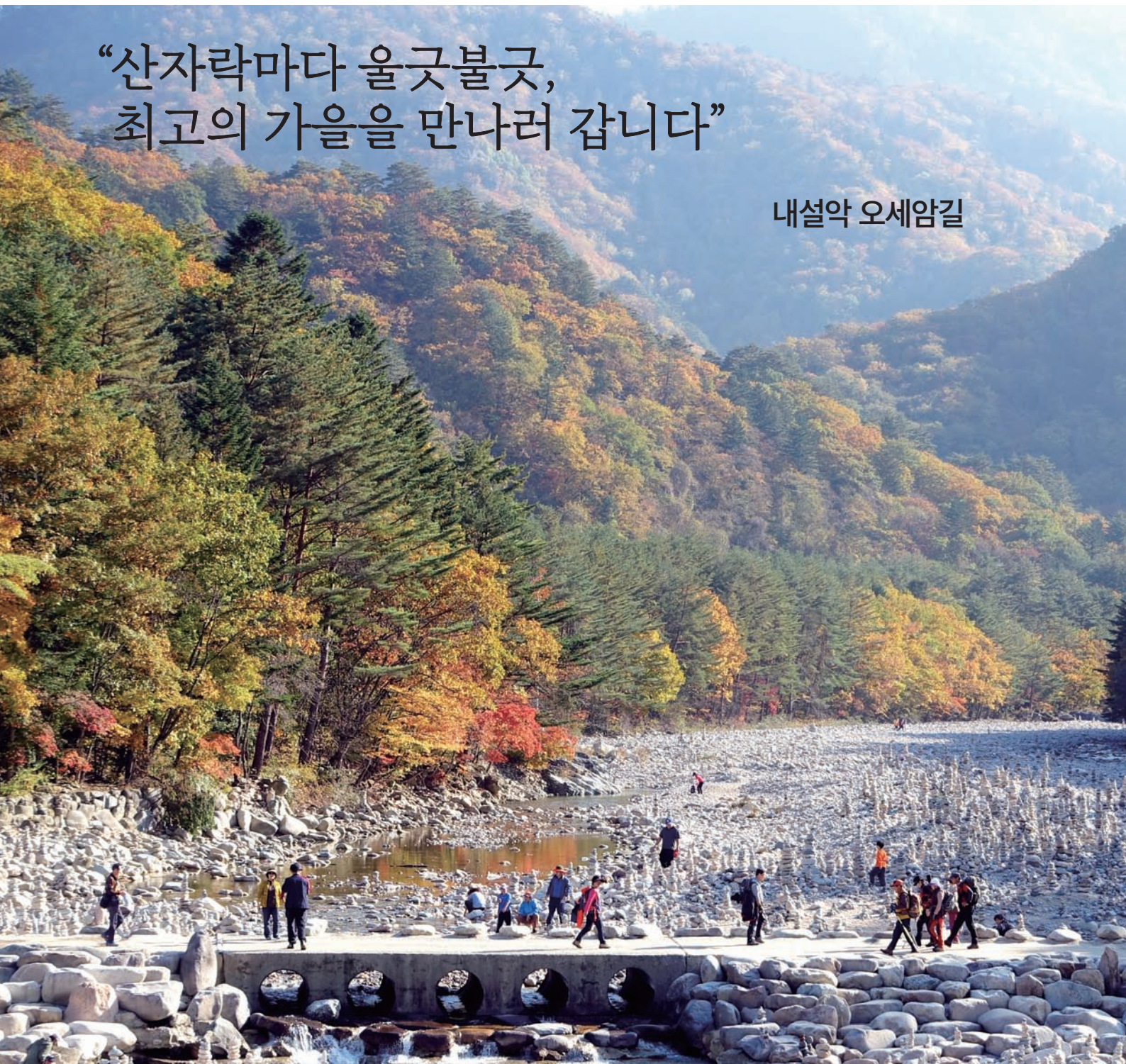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에 여야 의석을 섞고 선수(選數)에 따른 좌석 배치를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약 6개월 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 제22대국회의 본회의장 의석표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

글 이봉선 서기관(의사국 의정기록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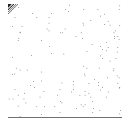
2) 1949년 7월 29일 개정된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를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때의 '국회법'은 '교섭단체'라는 용어 대신 '단체교섭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산자락마다 울긋불긋,
최고의 가을을 만나러 갑니다”

내설악 오세암길



오세암을 가기 위해 백담사 앞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가을은 설렘의 계절이다. 특히 10월은 가을의 절정이자 단풍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설악산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단풍은 서서히 아래로 물결치며 붉게 물들어 간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지만, 단풍은 사실 나뭇잎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잎이 활동을 멈추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자가분해가 진행되면서 붉은색 또는 갈색의 단풍이 들게 된다. 나무에는 매서운 겨울을 대비하는 슬픈 현상이지만 인간에게는 매년 찰나처럼 찾아오는 자연의 축복이나 다름없다.

아직 겨울도 멀었는데 단풍 타령을 하냐고 하겠지만, 올해 단풍지도를 보면 첫 단풍은 10월 1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오대산, 치악산으로 시나브로 번져간다. 세상의 모든 단풍이 전부 아름답다고 믿는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을 꼽아보라면 단연 설악산이다. 설악의 단풍은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 화려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설악의 단풍을 직접 보려면 높고 험준한 산을 올라야 한다는 부담이 앞서 선뜻 발걸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

설악산은 크고 깊다. ‘내설악’과 ‘외설악’, 그리고 ‘남설악’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큰 발품을 팔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가을단풍의 절정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설악 백담사에서 오세암으로 가는 길을 추천한다. 등산의 부담 없이 오솔길을 따라 설악의 깊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운치 있는 코스다.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는 6.4km, 3시간 30분쯤 걸린다. 길은 험준한 설악산답지 않게 순하고 부드러워 아이들 동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설악의 단풍을 즐기려면 서둘러야 한다. 내설악의 단풍 절정기는 일찍 찾아온다. 산 아래 도시에서는 단풍이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깊은 산속은 다르다. 일기예보에서는 보통 10월 20일경을 설악산 단풍 절정기

라고 하는데,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게 낫다. 꾸물대다가 자칫 뻘뻘 말라버리거나 찬 바람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만 보고 울어버릴지도 모른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내설악 단풍 산행은 백담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제군 용대리 백담주차장에서 백담사로 가려면 백담계곡을 지나야 한다. ‘백담(百潭)’은 ‘백 가지의 못’이라는 뜻으로, 이 골짜기에 못들이 너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차량은 다닐 수 없다. 백담사로 넘어가는 공용버스(셔틀)를 타고 사찰 앞까지 갈 수 있다.

코스는 내설악의 산문 격인 백담사에서 시작해 영시암을 거쳐 목적지인 오세암을 찍고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백담사는 도저히 깊은 산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고 평탄한 땅에 자리해서 인상적이다. 절 마당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그리고 스님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흉상이 있다. 한용운은 백담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고, 바로 이곳에서 1926년 너무나도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했다.

백담사를 나와 다리를 건너간다. 다리 아래 계곡에는 조약돌과 자갈이 사방으로 널려 있다. 계곡물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계곡에 흩뿌려진 돌을 모아 돌탑을 쌓는다. 그렇게 모인 소망이 수천 개의 돌탑이 되어, 또다른 풍경을 만든다. 물가여서 더욱 곱고 진하게 물든 단풍과 돌탑이 어우러진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경건하다.

다리를 건너 수렴동 계곡을 따라 평지처럼 순한 길이 한동안 이어진다. 계곡물은 투명하고 길옆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다. 만해의 ‘님의 침묵’에는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갓습니다...”라는 시구절이 있다. 만해의 마음을 사무치게 했던 단풍나무 숲이 이 길은 아닐까. 잠시 만해가 되어 깊은 사색에 잠겨본다.

울긋불긋 단풍길을 따라 1시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소박한 산사 영시암이 산객을 반긴다. 산행길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중간 쉼터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잠시 쉬고 10분쯤 더 가면 갈림길, 이곳에서 길은 오세암과 봉정암으로 갈린다. 봉정암은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8부 능선쯤에 자리한, 등산객들의 아지트와도 같은 암자다. 이곳에서 1박을 하고 설악의 진수인 대청봉이나 공룡능선, 천불동 계곡으로 갈 수 있다.

다섯 살 동자의 아름다운 설화가 깃든 오세암

오세암 방향으로 들어선다. 슬그머니 길은 오르막으로 변하지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오솔길이다. 그 길에는 수 백년 묵은 아름드리 전나무와 신갈나무, 단풍나

수 백년 설악을 지키는 거대한 노거수





오세암을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

무들이 우거져 있다. 수 백년 노거수를 만나 잠시 등을 기대본다. 고개를 들어 하늘로 솟아 있는 거대한 덩치를 바라본다. 수 백년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생각하니 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고갯길을 길을 따라 2.5km를 올라가면 영시암과 함께 백담사의 부속 암자인 오세암이 나온다. 오세암 직전의 고갯마루에서 잠시 멈춘다. 산등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오세암이 설악 최고 절경인 공룡능선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가을빛으로 붉게 물들어 가는 산 풍경과 어우러진 암자는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수채화였다. 해마다 조금씩 그 빛깔을 달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으리라.

고개를 내려서면 산행의 목적지인 오세암이다. 1444년 매월당 김시습이 사육신의 죽음을 목격한 뒤 머리 깎고 출가했던 암자다. 깊은 산속 오세암이 유명해진 것은 암자에 전해져 오는 설화 때문이다. 이곳 동자각에는 다섯 살 아이가 홀로 폭설 속에 고립됐으나 관음보살과 순수한 교감을 나누며 성불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온다. 이 설화는 정채봉 시인에 의해 성불한 소년 길손이와 눈먼 누나 감이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와 애니

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오세암 위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설악산 사찰 중에 가장 높은 봉정암에 다다를 수 있지만 약 4~5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불자들 사이에서는 백담사부터 영시암, 오세암을 거쳐 봉정암에 이르는 코스를 가리켜 ‘순례자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니 철저한 준비를 갖춘 뒤 도전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듯싶다.

백담사로 내려가는 하산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셔틀버스 막차 시간이다. 백담사에서 계곡 입구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지만, 막차 시간이 정해져 있다. 10월엔 오후 6시, 11월부터는 오후 5시에 막차가 끊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계산해서 하산을 하는 것이 좋다. 막차를 놓치면 백담계곡을 따라 7km(2시간)를 걸어 내려가야 한다.

시간은 손살같이 흐른다. 설악의 단풍이 스러지고 나면 2023년 가을과도 이별이다. 그나마 설악 최고의 단풍을 눈에 담았으니 멀어져 가는 가을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백담사행 버스가 오전 6시 49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자주 운행한다. 길이 좋아져 2시간 30분 밖에 안 걸린다. 용대터미널에서 백담사 공용버스 매표소까지는 10분 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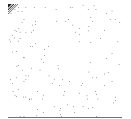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동흥천IC로 나와 흥천 방향으로 직진. 한계교 차로에서 속초 방향으로 우회전해 54km를 가다 백담교차로에서 백담사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한성필, 'Harmony in Havana: Sequence 2', 122×168cm(142×188), 크로모제닉 프린트, 2011-2015.

실재와 이미지를 담는 이미지 혹은 실재

한성필(1972-)은 지난 20여년 간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와 뮤지엄에서 전시를 열어온 중견 사진예술가다. 그를 사진가가 아닌 사진예술가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의 사진이 사진 본래의 기제가 아닌 독특한 소통어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사진 찍기. 한성필의 사진술이다. 일반적인 사진 작업은 '대상물을 찍어서 종이나 천 위에 프린트'하는 단선적인 방법론을 따른다. 그런데 한성필은 여기에 한층 더 복잡한 작업공정을 넣는다.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현수막에 자신이 찍은 사진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실재 공간에 배치하고 그것을 다시 사진 찍



한성필, 'Harmony in Havana-Illusionary Pagoda : Sequence 1', 122×151cm(142×173), 크로모제닉 프린트, 2011-2015.

어서 프린트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진 찍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소재나 주제에 대한 관심을 극적으로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 작품 'Harmony in Havana'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바의 수도 아바나라는 낯선 장소에 한국의 석탑을 배치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시각적 환기는 그냥 석탑 사진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중층적이며 극적인 시각적인 자극과 감성과 이성의 깊이를 더 해준다. 전통적인 건축의 거대한 기둥 사이에 자연 이미

지들을 프린트해서 설치하고 전면을 촬영함으로써 고전의 고정된 이미지를 새롭게 환기하는 작업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이렇듯 '실재와 사진 이미지'를 담아낸 한성필의 사진 이미지는 다시 '한성필의 사진 작품'이라는 실재로 귀환한다.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를 흐트러트리는 작업

도시공간을 탐구하고 다니는 한성필 작업에서 파사드는 그의 사진 작업의 핵심어다. 불어의 여성형 명사인 'façade[fasad]'는 (건물의) 정면이나 외관을 뜻한

다. 이제는 보편적인 언어로서 ‘미디어 파사드(Medoa Facade)’라는 익숙한 말이기도 하다. 파사드는 현대인의 주요 시·지각적 인지대상인 도시 풍경의 핵심 요소이다. 건물의 정면 측면이나 뒷면을 볼 일이 매우 드문 것이 도시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풍경은 파사드의 연속’이라도 말해도 무방할 정도다. 한성필은 도시공간의 핵심 이미지인 파사드를 자신의 사진 이미지로 가려놓고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한성필의 이미지 교란 작업은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를 흐트러트리는 작업이다. 유럽 여행 중에 만난 장면, 거대한 성당의 보수 공사 현장 앞에 성당 이미지를 담은 가림막을 본 순간, 실재를 대체하는 이미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해 준 그 장면에서 한성필은 자신의 작업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실재 사물을 가려놓은 이미지 앞에 서서 저 뒤에는 진짜가 있고, 그 앞에는 이미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그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실재와 이미지가 공존하는 상황에 대한 재발견을 수행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사진술을 실재를 재현하는 사진에서 실재와 이미지의 공존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진화시켰다.

한성필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진실은 사진의 이면에 관한 것이다. 사진은 대상물의 이미지를 광학적 도구를 통해 필름에 담고 그것을 종이 위에 프린트하거나 화면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관람자의 시·지각 감각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진을 통해 사실을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한성필의 사진이 환기시키는 바,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담은 허구라는 것이다. 한성필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시 사진 찍는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듯 사진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에 대한 단선적인 공식을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과 사건을 대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층적인 과정과 의미를 창출하는 사진예술가

한성필은 일반적인 사진가의 단선적인 과정을 넘어 중층적인 과정과 의미를 창출하는 사진예술가다. 그는 예술적 소통을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카메라 한 대 들고 이곳저곳 촬영지를 다니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수행한다. 그것은 사진 촬영이 아닌 작품 제작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예술가의 수행성이다. 화가가 캔버스 앞에 앉아 수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하듯이 한성필은 전 지구 곳곳을 누비며 대상물과 장소성의 관계를 재구조화하여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그것은 한성필의 사진예술을 단선적인 사진 촬영과 인화 과정이 아닌 복잡다단한 예술프로젝트로 엮어내는 원인이자 결과다.

이렇듯 공간탐구를 지속해 오던 한성필은 생태 의제를 만났다. 그것은 한성필 사진술이 궁극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역사와 현실의 지평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환기하며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예술가의 길에서 한성필은 한층 더 치열한 탐구의 길을 걷고 있다. 초기의 한성필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교란술의 측면을 부각하여, 공간 탐구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사진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진화하고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과 형식을 창출한 후, 그다음 과정은 자신만의 의제와 내용을 향하여 융맹정진하는 한성필의 길에 지구 행성이 안고 있는 우주와 생명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

글 김준기(광주시립미술관장)

국회 어린이박물관 포토존에서 찰칵!



국회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해서 전시실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관람을 마친 뒤 로비에서 만난 큐아이가 데려다준 포토존에서 찰칵! 즐거운 하루였어요.

전인경(서울시 강서구)

어미의 정확한 사용

우리말에서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은 참 어렵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녹음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많은 비문과 정확하지 않은 단어 선택 등이 발견될 것이다. 말을 사용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의사 전달에 있다면,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문법적 요소에서 오는 잘못은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를 할 때마다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서 지적한다면 말의 원래 목적을 도외시하는 꼴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문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 문법적 요소 중에서도 민감한 것이 바로 어미다. 모국어 화자에게 사용하는 어미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뿐이다. 대부분 어감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곰곰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가) 친구가 물을 마시고 나에게 말을 했다.

(나) 친구가 물을 마시며 나에게 말을 했다.

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고’와 ‘-며’의 차이 때문이다. 두 어미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는 동작의 선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며’는 동시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고’는 여러 동작을 나열하는 데 사용하고, ‘-며’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 다른 행동을 함께 할 때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두 문장을 읽어보면 (가)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나)처럼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친구가 물을 마시는 행위 다음에 나에게 말을 하는 행위가 이어서 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나)처럼 사용하면 물을 마시는 행위와 말을 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처럼 말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자주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음 예를 보면 두 어미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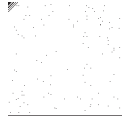
(다) 우리는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우리는 식당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의 ‘먹고 마시고’를 ‘먹으며 마시며’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다. (라)의 ‘웃으며’를 ‘웃고’로 해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행위를 나열하기 때문에 ‘-고’를 썼지만, ‘-며’를 쓰면 이들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어색할 수밖에 없다. 웃는 행위와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며’를 쓸 수 있지만, 웃은 뒤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는 어색한 표현이다.

문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우리는 어미의 사용에 따라 의미가 섬세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되도록 바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10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당.구.공

2023. 10. 2. - 10. 16.

작가 : 양정아 | 추천 : 김윤덕 의원실



꿈, 틱움

2023. 10. 17. - 10. 31.

작가 : 임경식 외 11명 | 추천 : 민병덕 의원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등

9월 1일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5~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7일 국감
9월 5일	여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실시
9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 7박 9일간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9월 8일	- 김진표 국회의장, 캄보디아에서 훈 마넷 총리와 만나 국방, 첨단기술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9월 13일	- 윤석열 대통령,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 특별보좌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 - 국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9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다자협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혀
9월 18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잇달아 회담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9월 19일	- 국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정의당,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9월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회민주주의 복원 위해 정치 문화 바꾸고 협치해야 한다”고 밝혀
9월 21일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
9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통해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혀

정리 윤성혜

우리 삶의 친절한 **법률 길잡이!** 말랑말랑한 **법 토크!**

우리들의 법

수요일 밤 10시



고정패널
유재환 (방송인)

MC 김일중
(前 SBS 아나운서)

고정패널
임주혜 (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